‘오월 정신을 오늘 정의로’ …5·18행사위 출범

평화와 통일, 민주주의 의미 담아
5월 공동체 정신으로 위기 극복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완수”



16일 오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3주년 5·18 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있다. /김태규 기자

올해 제 4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행사는 ‘오월의 정신을, 오늘의 정의로!’라는 슬로건 아래 진상규명과 5월 정신계승을 목표로 다채롭게 펼쳐진다.

정전 70주년을 맞아 평화와 통일, 민주주의·민생·전쟁·기후환경 위기를 오월공동체 정신으로 극복하고 미래세대에 대한 지지와 응원을 담아낸다는 계획이다.

제43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이하 행사위)는 16일 오후 2시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행사 준비에 돌입했다.

출범식에는 최철 상임행사위원장과 행사위원장단과 강기정 광주시장, 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장, 장우삼 광주시 부교육감, 김형미 오월어머니집관장, 시·도별 행사위원회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출범식은 인사말,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 출범선언문 낭독, 5·18민주묘지 합동 헌화·분향, 민족민주열사묘역 참배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위는 출범선언문을 통해 “군부독재를 떠올리는 민주주의 위기와 남북관계경색, 핵무장 논란 등으로 한반도 통일과 세계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며 “이같은 위협 속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일제에 면죄부를 내주고 여당 수뇌부가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5월 단체는 계엄군을 피해자로, 학살을 질서유지로 5·18 역사를 왜곡하며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있다”며 “과도한 당사자주의를 내세워 지난 30여년동안 전야제와 기념행사를 진행해온 행사위의 해체를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5·18은 당사자라고 주장하는 몇몇이 아니라 광주 시민과 이 땅의 민주화를 바라는 모든 민중이 함께 만든 것”이라며 “5월 광주가 민중의 치유와 회복의 힘을 증명했듯이 기념행사는 완전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과업을 완수할 것이다”고 말했다.

올해 5·18기념행사 표어(슬로건)는 ‘오월의 정신을, 오늘의 정의로!’이다.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희생마저 두려워하지 않았던 5.18 민중항쟁 정신을 이어받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오늘을 만들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 5·18을 겪지 않은 세대가 직접 행사를 만들어가며 청년과 청소년이 5·18의 당당한 주인공이 되도록 뒷받침한다.

최철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상임위원장은 “완전한 5·18 진상규명과 올바른 5·18정신계승만이 정의다”며 “행사위는 역사왜곡을 끝내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월열사와 민족민주열사들 앞에서 산자들의 몫으로 오월의 정신을 곧추세우는 행사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민찬기 기자

1~2월 학폭 75건…폭행·상해 최다

경찰, 학교전담경찰관 정원 확보

최근 정순신 변호사 아들 가해 사건 등으로 학폭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광주지역에서만 70여건의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두 달간 75건(1월 31건·2월 44건)의 학교폭력 사건이 신고·고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폭행 상해가 4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폭력 13건, 금품 갈취 3건 등 순으로 이어졌다.

최근 5년간 통계를 보면 2018년 435건, 2019년 524건, 2020년 346건, 2021년 423건, 2022년 408건 등이 발생했다.

이 기간 2,136건의 사건 중 폭행·상해 사건은 1,114건으로 약 54% 비율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성폭력 558건(26%), 금품갈취 162건(13%) 등 순으로 나타났다. 소년부송치나 내사종결된 사건은 지난 5년간 253건으로 집계됐다.

학교폭력 입건자 중 구속된 가해 학생은 2018년 4명, 2019년 6명, 2021년 6명이 구속됐고 나머지 해는 구속된 가해 학생이 없었다.

특히 2020~2021년 금품 갈취는 감소하는 반면, 폭행·상해·성폭력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관련 예방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통해 피해 사실을 알린 경우는 1.4%에 불과한 사실을 지적하며 광주 경찰의 학교전담경찰관 정원 확보 노력을 당부하기도 했다.

광주경찰청은 정원 미달이던 학교전담경찰관 정원 26명을 모두 채우는 한편, 선택과 집중으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올해는 학폭 특별예방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가해 우려가 큰 청소년들을 별도로 학교전담경찰관이 관리하는 데 집중해 학폭 사건 발생을 막을 계획이다. /최환준 기자

10대 중학생 실종…경찰 수사
학교 교실 나선 뒤 행방 묘연

광주에서 10대 중학생이 돌연 학교 교실을 나선 뒤 실종돼 경찰이 수색에 나섰다.

16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사는 중학교 2학년생 A양(14·여)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양은 이날 오전 학교 교실에 있다가 가방 2개를 챙겨 교문을 나선 뒤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주변 탐문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A양이 과거에도 2차례 스스로 집을 나갔던 이력 등이 있어 범죄 연루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실종 당시 A양이 흰색 상의와 검정색 계열 하의를 입고 있다. A양을 발견할 경우 곧바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윤영봉 기자

“법인택시 부적정 보조금 20억원 달해”

시민단체, 환수·중징계 촉구

광주지역 시민단체가 법인택시 업체의 노후 택시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광주시의 부실 감사를 지적하며 부적정 보조금 환수 및 관계 공무원 중징계를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자치21은 16일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반택시 선진화 사업을 명목으로 법인택시 업체에게 부적정하게 집행된 보조금이 최소 20억원에 달한다”며 “엄정한 재감사를 실시해 부적정 집행 보조금을 환수하고 허위 공문서 작성 등 관계 공무원을 중징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보조금 위탁사업자인 광주법인택시운송조합은 ‘광주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와 ‘사업지침’ 등을 위배해 상당한 규모의 차량에 부적정한 방식으로 지원금을 배부했다”며 “광주시의 관리 부실 및 방조가 있었고 허위 공문서까지 작성한 정황도 있다”며 “시민단체의 시정 촉구 공문을 받았음에도 아무런 시정조치를 내리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광주시는 즉각 사과하라”고 강조했다. /김혜린 기자

도로 한복판서 ‘쿨쿨’…음주운전자 덜미

광주 광산경찰서는 16일 술을 마시고 차를 몬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10분께 광산구 신창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 대기 중 운전석에 앉은 채 잠이 들어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음주 측정 결과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로 확인됐다.

/윤영봉 기자

